



VI

경제소식 및 정책동향

충북경제 관련 주요 Issue

Economy Capital Chungcheongbuk-do

| 충남 '2007년 투자유치 세부계획' 발표 |

1. 배경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 심화
-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반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 투자유치 계획 수립 필요

2. 주요내용

- 충남 2007년 투자유치 목표 12억 달러(신규 7억불 + 증액 5억불)
 - 자동차, 디스플레이, 철강, 석유화학 등 4대 전략산업 중심
 - 유치지역 : 보령 관창, 천안, 아산, 서산, 태안 등
- 투자유치 전략
 - 타겟기업 선정(자동차·반도체 등)과 증액투자(자동차 부품 등) 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5개 지구 추가 지정

3. 시사점

- “충북 아젠다 2010”의 2007년 투자유치 목표액 4.6억 달러
 - 투자유치 목표액 : 충남 13.7억달러('06년) → 12억 달러('07년)
충북 3.4억 달러('05년) → 4.6억 달러('07년)
 - 전국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: 116억 달러('05년) → 112억 달러('06년)
 - ‘투자유치 세부추진계획’ 수립 필요
 - 신규투자자 및 설비증설의 이원화된 투자유치 전략 필요
 - 투자대상 타겟기업을 선정하여 Man to man식 접근 필요
 - 외국인 전용 단지 추가 조성 및 투자 인프라 강화
- ※ 출처 : 충청투데이, 2007. 1. 15 (<http://www.cctoday.co.kr>)

| 2006년 지역기업 환손실 98억원을 1.6억원의 보험료로 해결 |

1. 배경

- 원화강세추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증대
-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용이한 환변동보험을 이용해 환리스크 헤지

2. 주요내용

- 대구시는 155개 업체에 수출보험료 1.6억원을 지원하여 환손실 98억원을 방지
 - '06년도 보험금 지급현황(단기수출보험 포함): 보험금 98억원, 환수금 14억원, 순보험금 84억원
- 2007년에도 환리스크 관리 강화
 - 2007년에도 원화강세 추세 지속으로 수출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보험료 확대(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 강화)
 - 기타 수출기업 지원시책 강화
 - 신용조사 및 해외 채권추심 수수료 추가지원 등

3. 시사점

-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지원 강화 필요
 - 환리스크 관리 교육 및 시장 접근성 강화
 - 엔화에 대한 헤지전략 수립
 - 주요 수출시장이 일본인 기업의 수익성 확보
 -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엔화선물을 이용 홍보
 - 향후 엔/원시장 개설에 따른 효과 및 엔화 헤지 교육 수립 필요
- ※ 출처 : 대구광역시 국제통상팀, 2007. 1. 15 (<http://www.daegu.go.kr/>)

|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|

1. 배경

- 8. 31대책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
-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

2. 주요내용

- 토지에 대한 증세 효과
 - 생산 및 고용을 증가시키나, 소비는 감소
- 토지 이외의 부동산(아파트, 주택 등),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
 - 생산과 노동공급을 감소시킴
 - 자본과 노동은 공급이 조절되어 증세에 따른 대체효과 발생
- 경제주체는 8. 31대책을 지속적이지만 한시적인 것으로 수용
- 통화당국이 통화량 조절을 통해 토지에 대한 증세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좀 더 크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음.
- 정부지출이 생산에 기여하면 토지에 대한 증세가 생산과 고용 및 소비를 증가

3. 시사점

-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의 주시
 - 2007년 상반기 경기하강에 전망이 우세
- 생산적 용도의 지방정부 재정지출 확대

※ 출처: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, 2007. 1. 16(<http://www.bok.or.kr>)

| 2006년중 충북지역 화폐수급동향 |

1. 배경

- 경제성장에 있어 금융부문의 중요성이 부각

2. 주요내용

- 2006년 중 충북 화폐 발행액은 전년대비 7.1% 감소, 환수액은 16.1%증가
 - 화폐 발행액 : 8,413억원('05년) → 7,814억원('06년)
 - 화폐 환수액 : 3,954억원('05년) → 4,591억원('06년)
 - 화폐 순발행액 : 3,223억원('05년대비 1,236억원 감소)
- 2006년중 충북 화폐환수율은 58.5% (전년대비 +11.8%)
 - 전국 환수율은 94.1% (전년대비 +1.4%)
- 충북의 화폐발행액은 전국대비 2.7%(전년대비 -0.3%p), 환수액은 1.7% (전년대비 +0.2%p)

3. 시사점

- 신용결제 및 전자결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화폐발행액과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 약화
 - 2006년 3/4분기 말 현재 현금통화 29.1조(본원통화 43.4조), 금융기관 유동성(Lf) 1,496.4조, 광의의 유동성(L) 1,778.8조원
- CD이용이 증가함에 따른 은행의 업무변경(은행 현금보유 한도 확대 등)이 충북 화폐발행액 감소의 주요인
- 화폐발행액을 지역경기변동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음.
 - ※ 출처 : 한국은행 충북본부, 2007. 1. 24 (<http://www.bok.or.kr>)

| 이자제한법의 배경과 영향 |

1. 이자제한법의 배경

- 최근 사채금리가 223%로 폭등하는 등 서민들을 과도한 고금리로 부터 보호할 제도적 방안 필요
 - 저신용층과 금융채무불이행자 보호 (2006년 신용회복지원신청 금융채무불이행자: 8만 5천명)
 - 대부업 등 사금융이용자: 564만명

2. 이자제한법의 내용

- 이종걸의원(열린우리당) 안 : 채택가능성이 높음
 - 기존 대부업체는 현행 이자상한선(연 66%)를 인정해주되,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40%이하의 이자를 강제
 - 40%를 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, 반환청구도 가능
- 심상정의원(민주노동당) 안
 - 전 금융회사 대출 및 개인 간 거래에 연 25%의 이자상한선 설정

3. 이자제한법의 경과

- 제정 : 1962. 1월 15일 법률 971호로 제정
- 폐지 : 1998년 1월 13일 IMF의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거 폐지
- 최근의 논의 과정
 - 국회 법사위에 이자제한법 계류 중
 - 이자제한법 개정추진에 반대하던 재경부가 찬성쪽으로 선회
 - 정치권이 2월 정기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
 -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자제한의 법적 필요성 지적

4. 이자제한법 개정에 대한 찬반논리

- 찬성논리
 - 서민들을 살인적 고금리로 부터 보호
 - 불법사채 확산 및 제2금융권위기 가능성 낮음
 -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대부업체 급증 및 사채금리 폭등

- 캐피탈 회사 회사채 발행금리는 10%내외인 반면, 대출금리 20~60%로 급격한 대출 중단 가능성 낮음.
- 06년 3월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 중 신용대출은 3.8%이며, 40%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극히 일부분

〈이자제한법 폐지전후 사채시장 비교〉

	폐지 전 (1995년 한국금융연구원조사기준)	현 재 (2005년 금융감독원 조사기준)
사채업체수	3,000여개(신문, 광고 등 추정)	36,000여개 (등록 11,931개, 미등록 25,000여개)
사채금리평균	연 24~36%평균	연 223% (등록 164%, 미등록 282%)
주 이용자	중소기업 및 자영업자(진성어음 할인)	일반인 76%, 자영업자 24%, 중소기업 0%

○ 반대논리

- 낮은 법적 실효성
 - 40% 이자제한은 처벌조항도 없는 상징적인 법
 - 대부업법(66% 이지율상한)을 그대로 두면서 개인 간 채권·채무관계를 규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음.
 - 등록대부업체만 만 6천개에 달하는 등 사실상의 관리 불가능
 - 서민대출 축소 및 불법사채업 양성
 -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급감할 가능성
 - 40~66% 이자를 내며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쓰던 사람은 불법사채시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.

5. 시사점 및 견해

- 충북 등록대부업체 (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) : 전국 551개(4.64%)
- 이자제한법의 취지에는 찬성하며, 실효성제고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중점
 - 대부업체 이용실태 및 피해사례 파악
 -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 감시·감독방안 마련
 - 저신용 소외계층 대상 무담보 소액대출 활성화 방안마련
 - 시민단체,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과 금융교육 강화

| 07년도 다보스 포럼 주요 의제 |

1. 배경

- 전 세계 정계·관계·재계 지도자들이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(WEF: World Economy Forum)이 24일부터 5일간 스위스 알프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개최되고 있음
- 올해엔 독일 메르켈 총리, 영국 블레어 총리, 브라질 톨라 대통령,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, 빌 게이츠, 다이먼 JP 모건 회장 90여 개국 2400여 명이 참석함

2. 주요내용

- ‘변화하는 힘의 방정식’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선 기후 변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으며, 자선사업 기업가, 웹 2.0이나 정보 전염병 등 특색있는 키워드들이 다뤄질 예정임
- 1. 기후 변화 : 지구온난화로 세계경제와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 지고 있음
- 2. 자선사업기업가(Philanthropreneurs) : 자선사업(Philanthropy)+기업가(entrepreneur)를 합친 말. 자선사업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 짐
- 3. 웹 2.0 : 네티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·지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 고조
- 4. 석유정치(Petropolitics) : 석유(petroleum)와 정치(politics)의 합성어. 석유와 천연가스를 차지하기 위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정세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
- 5. 트라이벌리즘(tribalism) : 세계화로 인해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음
- 6. 인포데믹스(Infodemics) : 정보(information)와 전염병(epidemics)을 합친 말. 정보화·세계화로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루머, 나쁜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음
- 7. 인구 구성 변화 : 중국과 인도에서는 영아의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, 러시아의 인구감소, 서유럽 노령화가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
- 8. 싱글 이코노미 : 독신 경제. 20~30대의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도시의 독신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음

3. 시사점

- 다보스포럼에서는 국제사회 주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되고 있음
- 다보스포럼의 위상, 규모, 참가자 등을 고려할 때 충북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사님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* 이명박 전시장은 2006년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로 회의 참석
- ※ 출처 : 중앙일보(1.25)

| 한·미 FTA 6차 협상 종료 |

1. 배경

□ 협상 목표

-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일반 쟁점들의 합의도출에 집중
-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·투자 유보안의 민감 분야 협상 진행
- 7차 협상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2. 12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

2. 주요내용

□ 협상 결과

- 미국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성사 가능성을 긍정 평가
- 자동차와 의약품에서 상당부분 합의 된 것으로 파악됨
- 농산물과 섬유 등 일부 쟁점은 8차 협상이나 고위급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
- 6차 협상 결과, 미국 관세 철폐율 83.9%, 한국 85.1%임
 - 관세철폐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품목인 기타 품목에서 50%를 10년내 철폐 대상으로 전환
 - 3~10년 관세 철폐 품목중 미국은 디지털TV와 LCD모니터 등 457개를, 한국은 정밀화학 연료, 항공기 부품 등 569개 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을 단축
- 농업분야는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였음
 - 235개 기타(예외적 취급), 농산물(HS 10단위) 가운데 초민감품목을 뺀 덜 민감한 품목의 양허(개방) 방향을 논의
 - SSG(특별긴급관세)와 TRQ(저율관세 할당)제도의 운용방식도 논의중

3. 시사점

- 다른 나라와 맺은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거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분석됨
 - 농업의 경우는 FTA 뿐만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DDA 농업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매우 큼
 - 도 차원의 FTA 및 DDA 협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※ 출처 : 농림부, 외교통상부, 한겨레, 중앙일보

| 우리나라가 '탑라이스(Top Rice)' 최적 생산지역 |

1. 배경

-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밥맛을 갖는 '탑라이스'의 성공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최고 품질의 쌀 생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

2. 주요내용

- 농촌진흥청에서는 일반농가에서 지역별 기후와 토질 등에 따라 품종 선택에서 모내기 시기, 포기수, 시비량, 물관리, 수확시기, 건조 저장 등 탑라이스 매뉴얼에 따른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급 수준의 원료곡을 생산 하도록 함
- '06년 '탑라이스' 생산단지 28개소(충북 2개소; 옥천, 진천), '07년 '탑라이스' 생산단지를 33개소(충북 3개소) 운영계획
- 충북 진천의 경우 지역에 알맞은 최고품질품종인 삼광벼를 재배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, 삼광벼의 미질이 매우 뛰어나고, 밥맛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농가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
- 탑라이스 생산기술과 지역에 알맞은 최고 품질품종을 선택 재배하여 최고급 쌀을 생산함으로써 외국 쌀 수입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3. 시사점

- 현재 탑라이스는 높은 가격, 홍보부족, 유통망 미흡으로 판매 미진
- 충북 생산 탑라이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전략수립 요망

※ 출처 : 농업진흥청 현황정보(2.1)

| 백악관, 의회에 신속무역협상권(TPA) 시한 연장 요청 |

1. 배경

- 백악관은 1월 29일 의회에 6월말로 종료되는 “신속무역협상권(TPA)”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
- FTA, 도하개발아젠다(DDA) 등 미국 대외통상에 새로운 변수 등장

2. 주요내용

-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의회에 신속무역협상권(TPA)을 계속 행정부에 위임에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됨.
-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“TPA가 7월 1일이면 종료되어 몇몇 협상이 시간에 쫓기고 있고, 의회가 TPA를 연장해 협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”고 설명(금주나 내주 부시 직접 언급예정)
- 미 의회의 신속무역협상권 시한 연장 여부에 따른 행정부 영향
- 시한 연장 승인시 : 협상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, 계속해서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외통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.
- 시한 연장 불승인시 : FTA 협상에 대해 의회가 일일이 협상안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 협상타결이 더욱 어려워짐.
- 한미 FTA에의 영향
- TPA 부여기한 내 협상 타결시 : 의회는 협상합의문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입법 여부를 결정
- TPA 부여기한 종료이후 타결시 : FTA 협상에 대해 의회에서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 행정부의 협상주도권은 상실
- 현재로서는 TPA 연장 가능성은 희박
-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역구 및 미국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FTA를 지지하지 않고 있고, 2008년 차기 대통령선거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점도 연장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(공화당의 견제를 위해)

3. 시사용어정리

- 신속무역협상권 (TPA : Trade Promotion Authority)
- 미국의회가 지난 2002년 미행정부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세계적인 통상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상전권(TPA)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말함.(미행정부 TPA 유효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임)
- TPA 아래에서는 미국이 상대국과 협상후 맺은 협정문에 대해 찬반투표만으로 통과 혹은 부결이 가능하여 통상협상의 속도가 빨라지나, 의회가 협정내용 수정은 불가
※ 출처 : 연합뉴스, 문화일보, 서울경제, 중앙일보, 2007. 1. 30~31일자

| 올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검토 |

1. 배경

- 권오규 부총리(재정경제부장관)는 2월 1일 인천자유구역내 송도 국제업무단지(동북아 트레이드 타워) 착공식에 참석하여
- 금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추진방식을 새롭게 평가해 보고 추가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.

2. 주요내용

- 금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추진방식을 새롭게 평가하고 추가 확대지정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힘.
 - 이어 재정경제부는 2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을 당장 추가 지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힘.
 - 그러나 국내산업의 성장엔진 강화와 규제완화의 파급확대 필요성 차원에서 추가지정의 타당성이 있지만,
 - 현시점에서 성급한 추가지정은 국가역량분산, 과잉투자, 지역간 과당경쟁 등의 문제점을 우려
-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평가해 보고 추가지정 타당성, 시기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
 - 금년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지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
-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현황
 - 경제자유구역 : 현재 인천, 부산·진해, 광역 3곳이 있으며, 모두 항만을 배후로 하고 있음.
 - 현재 지자체 상황 : 경기도 평택·당진과 충청남도 군산·장항 등 2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온 상태

3. 시사점

- 충북의 임공형 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 검토 필요
 -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이 모두 항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, 충북도에서는 중장기적 차원으로 공항과 오송·오창 산업단지 등을 배후로 하는 임공형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변밀한 검토가 필요

※ 출처 : 재정경제부 보도자료, 이데일리 등, 2007. 2. 1~2일자

| 외국인 투자환경 상시 점검·개선체계 구축 |

1. 배경

-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One-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Invest Kored(IK)에 파견된 11개 중앙부처, 6개 지자체, 법원 등의 파견관과 IK의 홀닥터(외국인투자자 고충처리 전담전문가) 등 28명이 참여하는 「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」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감.

2. 주요내용

- 외국인투자 규제개선 포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들을 전담해 해결될 때까지 행정관행 개선, 법령개정 등을 추진하는 민·관 합동 전담반으로 출범
 - 역할 : 중앙부처, 지자체, IK가 접수한 애로사항 미결과제를 이첩 받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 담당
 - 운영 : 조세, 금융, 투자제도, 행정절차, 노사 등 5개 분과 운영
 - 현재 1차로 '06년 홀닥터를 통해 접수한 애로사항중 행정절차 15건, 조세제도 6건, 투자제도 6건, 금융 4건, 노사 5건 등 36건을 이첩 받아서 활동에 착수
- 참여부처 및 지자체
 - 중앙부처 : 산자부, 해수부, 국세청, 법무부, 정통부, 법제처, 과기부, 환경부, 노동부, 관세청, 건교부, 대법원, 한국산업단지공단
 - 지자체 : 충북, 대구, 경북, 충남, 전북, 부산
- 1차 검토과제 내용
 - ※ 별첨자료 참조

3. 시사점

- 충북 파견관(이근우)을 활용한 검토과제 정보 수시파악 필요
 - 투자개선포럼 제1차 검토과제와 관련한 정보자료를 적극 입수하여 충북의 투자환경 개선자료로 활용 필요 박사
- 투자유치팀 내에 외국인투자자 고충처리 전담전문가 접목 고려
 - IK처럼 도내에도 “홀닥터” 형태의 “Friend Doctor” 전문가 활용 검토
- ※ 출처 : 산업자원부 참고자료, 2007. 2. 8.

| 유통시장 개방 8년 결과 |

1. 배경

- 지난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된바 있음.
- 이 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통서비스업이 개방된 지난 1996년도 이후부터 대형마트 할인유통점 확산으로 인하여 중소형 점포가 무려 14만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도됨.

2. 주요내용

- 유통시장 개방 8년 동안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는 248곳이 증가하고 재래시장상점, 동네 영세가게 등 중소규모 점포는 14만개가 감소
 - 중소유통업체 : '96년 751,620개 ⇒ '04년 611,741개로 감소
 - 대형마트업체 : '96년 28개 ⇒ '04년 276개로 증가(10배 증가, '06년 331개)
 - 충북도 대형마트할인점이 증가, 중소점포, 재래시장과 갈등과 어려움 지속 중
- 전국 재래시장 경영지표('04년 / '05년 비교)
 - 재래시장 매출액 : 35.4조원 ⇒ 32.7조원 (2.7조원 감소)
 -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매출은 2.6조원이 증가
- 유통시장 관련 입법발의(안)이 국회에서 계류 중 (정부와 이견상존)
 - 대규모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(이상민의원 대표발의)
 -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(김영춘의원 대표발의)
 -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(심상정의원 대표발의)

3. 시사점

- 충북 청주시의 도시계획조례 이용 입지제한과 충청북도지사 업무지침을 통한 출점 간접규제가 사례로 제시됨.
- 외국의 대규모점포 출점규제에 대한 법률내용 검토 필요
 - 일본, 프랑스, 이태리, 영국, 독일, 미국 등의 법률안 검토
- 도내 중소유통업 실태진단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
 -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와의 협력증진 상생방안 강구

※ 출처 : 동아일보, 문화일보, 한겨레, 부산일보, '07. 2. 26, 산업자원위원회 자료참조

| 최근 주가폭락의 원인과 시사점 |

1. 배경

- 중국의 긴축정책 및 위엔화 절상에 대한 우려감과 기관들의 차익실현으로 2월 27일 상하이지수는 8.84%급락 (선전 성분지수 : -9.29%)
- 중국발 악재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증시의 동반 하락

2. 주요내용

- 27일 차이나쇼크의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의 동반하락
(영국 : -2.31%, 프랑스 : -3.02%, 독일 : -2.96%, 미국 : -3.29%)
 - 중국 인민은행총재의 금리인상 및 위엔화절상 가능성 언급
 - 일본의 금리인상에 따른 엔 캐리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가능성
- 한국 증시도 차이나쇼크이후 나흘 연속 하락하여 6%이상 하락
 - 2. 27(-15.43P) → 2. 28(-37.26) → 3. 2(-2.87p) → 3. 5(-38.32p)

3. 시사점

- 충북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중국경제의 갑작스러운 변동은 리스크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.
 - 글로벌 증식 폭락 및 일본의 금리인상으로 엔 캐리트레이드가 본격 청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가중
 - 투자자들은 투자전략의 재점검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기업들도 중국경제 동향에 주목할 필요
- ※ 출처 : 매일경제신문, 2007. 3. 6 (<http://www.mk.co.kr>)

| 괴산, 산업단지 개발방식 바꿔 재추진 |

1. 배경

- 민간참여 개발방식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괴산산업단지가 지난 97년 (주)진로 부도로 10년째 공사가 중단됨.
- 이에 괴산군에서는 담보상태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기존 민간참여 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

2. 주요내용

- 지난 96년 착공되었으나 '97년 (주)진로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괴산 지방산업단지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민간개발방식에 탈피하여 공영개발방식을 검토 중에 있음.
- 개발방식의 전환내용
 - 산단개발방식 : 민간개발 방식에서 ⇒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
 - 자원조달방법 : 부지매입 예산 ⇒ 지방채발행에 의해 총당 예정
 - 현재추진상황 : 공사재개를 위해 하이테크소사업과 진로공장 매각협상 중
 - 부지매입 불가시 : 제3기업을 연결해 우선개발 ⇒ 이후 진로사업 재추진시 군이 다른 부지를 제공 하는 조건을 진로 측에 제시
- 괴산군의 산업단지 개발구상
 - 국내굴지의 발효제품 생산업체만 유치
 - 발효산업 전문단지로 개발계획
 - 괴산군은 도와 공조하여 오는 6월말까지 매듭지을 예정

3. 시사점

- 자원조달방법
 - 지방채발행 통해 조달
 - 향후 전망과제
 - 지방채발행을 위해서는 도의 투융자 심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
- ※ 출처 : 중부매일, 2007. 3. 6

| 경남, 지역경제동향분석시스템 구축 |

1. 배경

- 민선 4기 출범이후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과 역할 증대
- 경제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중요성 대두
-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지방정부 경제정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

2. 주요내용

- 경남도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상공회의소, 경남발전연구원과 지역경제동향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
 - 2008년까지 경남 경제동향분석시스템 구축
 - 시스템 구축시까지 상공회의소가 조사하는 BIS에 대한 정보 공유
- 기관간 공동연구·조사 활동과 자료·정보·인력에 관한 교류 활성화

3. 시사점

- 충북의 경제동향분석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수립 필요
 - 예산 및 인력 강화 및 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
- 경제동향분석은 지역경제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일종의 투자적 성격으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에 주목하여야 함.

※ 출처 : 경남발전연구원, 3. 15 (<http://www.gndi.re.kr>)